

## 보건복지동향

2005. 10. 21 ~ 2005. 11.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희망한국21, 사회안전망 대책에 8조 6000억 투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 사업에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현재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했는데 이를 130%로 완화해 11만6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인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 등을 미리 돕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마련, 내년 중 10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 ▶ 지역복지위원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 강화

-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복지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번)'를 설치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지속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번호를 부여해 보호하고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무료진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세금보담을 덜어주고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부터 도입하고 첫 급여를 2008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임신부,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을 2007년부터 15%에서 10%로 인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 국민임대주택 2009년까지 42만호 공급

- 주택정책으로는 2009년까지 4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물량을 2015년까지 5만호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 또한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자와 쪽방거주자 등에게 임대하는 단신자용 임대주택사업과 전세임대, 철거신축임대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3%미만으로 인하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 교육, 보육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차상위 고교생 대상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14만명에서 2007년까지 1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해 저소득층 이공계의 경우 무이자융자를, 저소득층에는 저리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 또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으로 당정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원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8년까지 달성하는 등 노인요양보장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치매·중풍 노인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본격 시행키로 했다.

#### ▶ 읍면동 사무소 '주민복지·문화센터' 전환

-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일선창구로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해 주민생활지원관련 기획, 자원관리 및 연계, 통합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당정은 이밖에도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

- 급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군구 당 각 1명의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 김근태 복지부장은 이날 고위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어야 경제강국이 된다”며 “이번 사회안전망은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추락예방과 EITC 제공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이어 “이를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차이는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구현될 수 있는 사회’인 ‘희망 한국 21’로 명명하고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늘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등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올해보다 18.7% 많은 490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중증 6만원, 경증 2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7만원으로 인상된다.
- 또 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도 수당을 받게 돼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4000명이 많은 29만9000명의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도 확대돼 장애인 생활시설 62개·직업재활시설 1개를 신축하고 기존 시설 중 60곳은 장비보강, 53곳은 개보수를 한다.
- 특히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가구당 400만원씩 1000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1000명에게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권역별 재활센터 증축(270억원) △국립재활연구소 건립(38억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99억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위해 2천300억 투입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2천3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천3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와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약 1,1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 ▶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 내시경 수술 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가치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고가의 치료재료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보험적용하기로 했다. 약 4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
  - 현재 중증환자 부담경감을 위해 암, 심장뇌·혈관질환(개두술 및 개심술)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심장·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집중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간 약 800억원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유전체연구부는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2005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 코호트 사업 I' 등을 통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들(2005년도: 약 2만명)에게 제공된다.
-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대상자들의 식생활 영양평가, 성인병검진결과 및 추가검사결과(신장기능평가, 요산농도, 염증반응, 콜레스테롤치), 체성분 분석, 대사증후군 판정 등 개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기적인 건강소식지를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반복 실시 등이며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The Korean Health and Genome Study)』은 40세 이상 남녀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대사증후군 등 5대 질환에 대한 건강·질병지표를 발굴하고자, 주요 생활습관질환의 위험인자인 환경요인, 상병 정보 및 유전체 시료를 확보하고 대상자의 질병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현재 전국 30여 개 의과대학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본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을 통하여 2년 내 10만 명 이상에게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나아가 전 국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의 모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참여 주민들께 건강상태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건강관리를 해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1544-9030 (금연성공)

보건복지부는 전화를 통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상담전화(Quitline)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무료로 상담 및 약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 여성 등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전화를 통해 상시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연상담전화(Quitline)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금연상담전화는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여 효율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한 결과, 1년간 금연성공률은 23.6%이었다.
- 보건복지부는 올 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연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544-9030(금연성공)으로 시범사업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원에 의한 상담을 제공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상담을 제공한다.
- 또한 금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연상담전화 홈페이지(quitline.hp.go.kr)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금연 정보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금연상담은 일부 시범사업 지역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
  - ※ 시범사업 지역 : 서울(성북구), 부산(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인천(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북 포항시(남구, 북구)
- 보건복지부는 향후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해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흡연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핸드폰으로 금연서비스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흡연예방과 보다 접근도가 높은 대국민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무료 금연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한다.

- 2004년 3월, KTF를 시작으로 이번 달 11일부터 SK텔레콤을 통해서 제공하며, 12월에는 LG텔레콤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 서비스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포탈사이트(홈페이지명: <http://nosmokeguide.hp.go.kr>, 금연길라잡이)의 인터넷 금연교육프로그램인 '금연 마라톤' 및 금연 관련 각종 콘텐츠 등으로, 홈페이지명과 동일하게 「금연길라잡이」라는 명칭으로 무료 제공한다.
-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단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통신사에 접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본통신료 및 금연도우미에게 문자전송(SMS)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건당 30원)는 사용자 부담이다.
- 또한 한번 다운로드 받은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수시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신요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자신의 흡연이력 입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20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금연에 도달할 수 있으며 셀프체크 및 금연테마저장을 통해 금연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 PC방 및 만화방 전면금연, 국립공원 실외 금연

앞으로 PC방 및 만화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다중이용하는 실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 담배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가 앞뒷면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확대된다.
- 잡지광고의 흡연경고문구표시도 커진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05.5.18)을 계기로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대비 점검

### ▶ 인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국내 생산 방안 적극 검토

- 현재 세계적으로 PI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스위스 로슈에서 독점 생산하는 타미플루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는 현재 70만명 치료분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9월에 2만명분을 추가 주문하여 '05.10.31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까지 72만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06년 까지는 당초 목표 100만명분 달성이 현재로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타미플루 생산에 대한 강제실시 요구가 비등한 일부 여론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사용 가능한 치료제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미플루 국내생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우선, 로슈사에서 제안하는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제조가능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자체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 ▶ 인플루엔자 치료제 보험급여 범위 확대

- 조류독감(Avian Influenza)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보험급여 대상이었으나 급여조건이 엄격해서 시장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PI발생시 치료제 확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조건을 완화하여 시장

유통물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 백신개발 연구 적극 추진

- 현재 전남 화순에 인플루엔자백신공장을 건설하여 2008년에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전에 대비해서 긴급 백신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 백신 자체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국민 홍보 및 보건의료인 교육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포스터, 리플렛 등 인쇄매체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홈페이지 활용, 시청각 자료 이용 등 입체적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기관(보건복지부, 농림부)과 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등)공동으로 닭고기·달걀 소비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최신 발생동향 및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http://avians.cdc.go.kr>) 개편('05.11.2)한다.
- 공항만 입출국장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인 단체학회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기관(농림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과의 교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복지상담이요? 129번 누르세요**

“언제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세요. 위기에 처한 가정문제나 보건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가 1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희망의 전화, 129 콜 서비스’를 개통했다.
-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시내전화 요금으로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 보건소, 전문상담센터 등에 연

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복지콜센터’를 개통, 129번으로 통합된 복지상담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적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일과 야간에는 상담 예약시스템(ARS)을 통해 예약을 해두면 근무시간 중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준다.
- 아동 및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상담의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아동·노인 학대예방센터 등과 연계해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통합 콜센터는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개별적으로 운영돼 통합서비스가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통합된 전화는 노인학대(1389), 아동학대(1391),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치매노인(1588-0678), 정신보건(1577-0119), 암정보(1577-8899), 응급의료(1339), 건강보험(1588-1125), 국민연금(1355) 등 각종 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 10개다. 이들 전화는 129 콜센터와 별개로 운영된 뒤 2007년부터 폐지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 참여, “보건복지콜센터가 호주 센터링크와 같이 한 통화의 전화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치 위생관리 ‘원료 구입부터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정부는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 김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원료의 구입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토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김치제품에도 의무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메뉴얼에는 배추원료 등 이물 제거시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고, 절임공정 이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재세척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아울러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유통이전단계에서 검사명령을 강제화

- 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제' 도입도 추진한다.
- "내년부터 배추 등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
- 보건당국은 이와함께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오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실태조사팀을 구성, 기생충알 검출 김치의 재배지 토양·수질·영농자재 등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치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김치 등 우리 고유식품의 원료인 배추·인삼 등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
- GAP는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체계로 지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는 965개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 김명현 식약청 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관리를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하고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적극적 장기기증정책 위해 장기기증관리개선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뇌사자를 적극 발굴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키로 하였다.

- 이는 뇌사장기기증이 감소하여 장기수급불균형으로 이식대기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안은 또한 능동적 장기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잠재뇌사자를 신고토록 하고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 현재 장기구득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기증 설득과 적출 코디네이션을 전담 수행

- 하는 『장기구득기관(OPO)』의 신설을 추진하되 우선,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개편한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HOPO :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07년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독립장기구득기관(IOPO : Indep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은 전문인력 확보, 소요재원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최적화된 모형의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현재의 이식대상자 선정업무 외에도 중환자실·응급실 중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의 실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 그리고, 뇌사자는 발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기증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행정업무는 유가족에게 요구하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자 가족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동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어 작년 말 86명에 불과하였던 뇌사장기기증자수가 2010년에는 500명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장기이식대기자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쯔쯔가무시증 감염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들쥐 등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제3군 법정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이 금년 10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전국 보건기관에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감염 위험군(농부, 야외작업 및 활동자, 군인)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료인은 발열 환자 진료 시 쯔쯔가무시증 확인 및 신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최근 5년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추이는 2001년 2,638명이 발생한 이후 2년 연속 감

소하였으나, '0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1월 7일 현재 2,288명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3%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찌꺼기무시증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털진드기가 기생하는 들쥐가 서식하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나라는 야산에 있는 밭 주변의 관목 숲이 위험 환경이다. 따라서 밭일을 하는 농부와 야외작업자, 군인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찌꺼기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수칙**

- 긴 팔, 긴 바지 착용 : 밭일 등 야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긴 바지, 긴 팔 옷을 입고 바지단은 양말 속에 넣어 털진드기의 유충이 몸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여야 함
- 진드기 기피제 : 작업을 하기 전에 옷 위에 벌레 기피제를 뿌려서 털진드기의 유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 따뜻한 물에 샤워 : 몸에 기어오른 털진드기는 한 동안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마친 후에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한 샤워를 해서 털진드기를 제거하여야 함
- 작업복 세척 : 작업복은 그대로 다시 입지 말고 세척을 해서 옷에 붙어 있는 털진드기를 제거하여야 함
- 조기 진단과 치료 : 찌꺼기무시증은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쉽게 치료가 되지만 단순 감기약으로는 낫지 않기 때문에 야외 작업 및 활동 후 열이 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함

**국민연금 올해 주식투자 38.73% 높은 수익**

국민연금이 올해 1~9월 주식 부문에서 38.73%의 높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을 포함한 금융 부문에서는 7.92%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3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3분기 기금운용현황 보고'를 논의했다.

- 아울러 3분기까지의 수익률 면에서는 국내 주식이 39.67%를 기록해 이 기간중 벤치마

크가 되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36.29%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였다. 해외주식 수익률은 6.28%에 그쳤다.

- 채권의 경우 국내 채권 투자수익률은 4.82%로 지난해 5.63%보다 떨어졌고 해외채권 투자수익률 역시 전년도 5.79%보다 낮은 3.62%에 머물렀다.

-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은 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국내채권 위탁운용은 장기듀레이션 전략을 위주로 운용함으로 인해 금리 상승 국면에서 조정에 실패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위원회측은 국민연금에 대해 "최근 시장이자율 반등으로 인해 채권의 시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2002년 이후 전반적인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편 위원회는 내년에 국민연금 신규유자금의 1%인 6600억원 이내에서 새롭게 복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실버사업, 장묘사업, 임대주택사업, 보육사업 등의 타당성 분석을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1~2개 핵심 복지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복지부 소관 이전 완료**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서 친숙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관리가 보건복지부로 이관 완료됐다.

이로써 34개 지방의료원 관리가 복지부에 이관됐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05. 7. 13.공포, '05. 9. 14.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10호, '05. 11. 1.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7호, '05. 11. 15.공포·시행)을 제정·공포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촉진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 장기요양에 필요한 병상추가 건립비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200병상 기

준)도 지원된다.

- 이를 통해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 진료, 재활, 영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비만관리, 국가가 나선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32.4%(체질량지수 25% 이상)로 지난 10여 년 동안 1.6배 증가(여자 1.3배, 남자 2배 증가) 하였다.

특히, 소아비만은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비만 비율을 좌우하게 되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초등학생 비만 비율은 2배 정도 증가해,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비만인이 정상인에 비해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은 당뇨 2배, 고혈압 1.5배이며 고도비만의 경우 당뇨 5배, 고혈압 2.5배이다.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 복지부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한 관리를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정착시키고,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체계인 「국가비만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 운동 및 신체활동량 증가, 비만치료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기존의 식생활지침을 근거중심으로 개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의 열량 및 지방함유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게 한다.
-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식품광고 및 음료수 자판기가 규제되고, 지방, 나트륨, 당분 함량이 적은 대체식단 등 학교급식 및 직장 구내식당의 건강한 메뉴를 유도한다.
- 한국인의 운동 및 신체활동 지침 제정, 체조 및 전 국민 걷기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신체활동의 생활화를 추진한다.

- 운동 및 신체 활동 증가를 위해선 지자체, 사업장 등에서 운동시설 개방, 공원·산책길·등산로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산책로 등에 운동 및 신체활동 정보 게시판, 엘리베이터 앞 계단사용 장려 표지판 설치 등을 권장한다.
- 이와 함께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등에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실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보험급여 확대도 추진된다.
- 현재 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는 비만 퇴치를 국가 보건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및 미국에서도 국가 비만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신체활동 및 적절한 음식 섭취를 장려하고 있다.